

정책동향

장마철 누전차단기 작동확인 필수

산업안전공단이 여름 장마철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 요령을 발표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은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응벽, 석축 등의 붕괴 예방 조치, 장비 및 자재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의 안전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 대책요령은 우기에 대비한 임시 수전설비 위치의 적합성 여부, 이동형 전기기구 상태, 임시 분전반의 설치 상태, 이동전선 및 가설 배선 상태 등의 감전재해 안전조치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외함 접지 상태, 활선 작업시 작업자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유무, 가공선로 접촉, 접근시 안전조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장마철 안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장마철 안전검사표를 배포해 검사항목과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경기남부조달서비스센터 설치

조달청은 각지방청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시설공사 관련 창구를 일원화 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지난 6월 4일 조달청 중앙보급창내에 '경기남부 지역 조달서비스 센터'를 설치,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에서는 행정용품과 비저장품의 공급상황과 계약진행사항, 시설공사 계약진행사항 및 제도 안내와 상담, 기타 조달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역적으로 경기남부지역에 근접하여 지원



정책동향

상담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비품과 사무용 집기 활용이 가능,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종전에는 수원시, 의왕시, 평택시 등 경기남부지역 공공기관과 조달업체의 경우 행정용품은 중앙보급창(경기도 용인 수지), 철근 시멘트등 비저장품은

인천지방조달청(인천직할시 중구 신흥동), 시설공사 관련사항은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나할함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해외산업 정보망·DB시급

중국의 급부상, 선진국 시장의 재편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잠식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외 산업 정보망 및 DB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산업경제정보' 보고서는 세계 시장 및 기술변화, 경쟁 기업들의 동향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어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적 활용 전략과 이용 가능한 자료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하드웨어적 네트워크 구축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약 목표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외 산업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크게 위축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선진 주요국들은 IT혁명에 따라 산업 정보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인터넷망을 통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인터넷 기반 시설을 무역 및 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산업 DB구축 등을 통한 인터넷 활용을 내실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원, 국산 품질신뢰성 강화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산업용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산업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도 국제 표준의 품질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국산 산업용 SW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SW를 내장한 산업기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W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SW 품질평가 국제표준인



정책동향

ISO9126과 ISO12119를 근간으로 한 SW 평가 기술을 도입,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 등 6개 품질특성을 평가해 국산 산업용 SW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공정계측 제어용 SW'와 '디지털 산업기기 등에 내장되는 SW'를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반적인 산업용 SW분야로 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기술표준원은 시범인증 사업의 국내업

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시범인증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SW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사업을 통해 SW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한 제품의 오류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국산 SW의 품질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SW 대외 수출경쟁력과 제조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업배치법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

공업배치법이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30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개정안 중 주요내용으로는 ●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기업의 공장설립용이화에 있어서는 우선 현재 60일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30일로 단축한다는 것으로, 공장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옴부즈만'을 설치해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중앙정부에서 해결가능한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상정하는 한편 지자체 해당사항은 관계지자체와 협의 한다는 계획이다. 또 '표준공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공장설립 가능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제도를 합리적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지역별



정책동향

산업 집적지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한 10단위 산업 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기반산업집적 규제자유지역 시범운영제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개발 보조금제도를 도입, 낙후지역과 산업공동화지역을 선정해 지역개

발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규제를 비롯해 산업단지 준공 이후의 유치업종이나 용도 변경 등 여건변화에 신속 대처토록하는 산업단지내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시킨다는 방향으로 공업배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관적 검증, 평가기반 전무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넘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전력수요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력수요관리는 최소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기사용 패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을 일컫는다.

수요관리는 부하평준화를 통한 전력원가 절감에도 모하고 에너지자원 절약 및 신규 전력설비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합리적 수요관리는 곧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수요관리는 90년 이후 발전설비 확충에 따른 재원 조달과 입지확보, 환경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900억원을 투입, 최대수요 323만 kW를 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요관리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서기관이 최근 '수요관리 평가방안 워크숍'에서 내놓은 '구조개편이후 수요관리사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판단하는 수요관리사업의 현안은 구조개편에 따라 사업의 추진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체제로의 점진적 개편,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유지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부는 특히 그 동안 수요관리 사업이 사업성과를 검증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과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및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사업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평가모형, 전산시스템, 평가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구축해 사업



정책동향

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수요관리평가시스템은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지표인 설비감축 효과와 에너지절감 효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지표와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요관리 사업의 타당성이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수요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은 전력회사 주관하에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 독립적 패널이나 전문기관에서 평가기능을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획대비 집행실적이나 부하관리

량 목표 기준 등을 실적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고 보급량 및 지원금 설정시 개략적인 경제성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성과평가에 필수적인 기본 지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실적과 예측지표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성과계량시스템이나 수요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요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과 전산모형, 수요관리 DB, 표준절차 개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데이터 조사 및 분석 등 수요관리 평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로등 안전관리 허술

장마철이 임박하면서 안전관리가 허술한 가로등과 신호등이 또다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가로등에 의한 감전사가 발생하는 등 가로등과 신호등 안전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제때 시정하지 않아 안전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행자부, 서울시,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가로등·

신호등 정비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 내 가로등과 분전함과 가로등주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작동상태도 양호하지만, 서울 동작구, 인천 남구, 경기 수원시, 고양시 등의 일부 고지대에 위치한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계양구의 경우 가로공원과 택지개발지구 등에 설치된



정책동향

누전차단기에는 20~30개의 가로등주를 연결, 누전 차단기 과부하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의 경우에도 누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신호등간 배선을 병렬로 연결,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전함·제어함과 동주의 감전감지를 위해 설치된 접지봉이 불량하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팬, 전기광고물 등 사설 전기시설물이 침수될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상습 침수 지역의 가로등과 신호등은 집중 관리하여 개보수 작업을 완료, 위험요소를 제거했으며, 지중선 공사로 작업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가로등을 연결하는 공중 임시케이블을 설치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말하고 “또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수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미 보수지역은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전기 안전사고에는 큰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곳도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개보수작업을 마친 곳이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보수 작업 완료와 동시에 안전검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각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장마철대비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또 “가로등·신호등 개보수 작업은 지자체 별로 추진하고 있어 시·도마다 추진 현황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를 가로등과 신호등 보수 작업에 편성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보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전기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추진

진공차단기, 개폐기, 전력변환장치(UPS), 건식변성기, 조명용 램프, 형광안정기 등 6대 핵심 전기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평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주요 전기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신뢰성시험평가와 신뢰성인

증계를 실시해 국내 전기업종의 혁신적인 기술력 향상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내년 4월까지 정부 24억원, 민간 8억원 등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 신뢰성 평



정책동향

가기준 제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평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신뢰성평가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기기업중 중전기기분야와 부품소재부문에서 향후 200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 달성과 연간 5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12억달러 상당의 생산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잠재적인 경제효과도 발생, 중전기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지고 기술인프라 향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에도 한 몫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전기와 김경수과장은 “이번 핵심 전기부품소재 신뢰성평가사업 추진은 국산 전기부품 수요확대와 수출증대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오고 불량률 감소 등 제품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게 돼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도 사전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부품소재 신뢰성평가사업은 산업자원부를 주관부처로 한국전기연구원이 실시기관으로 추진되며, 평가기관 중 중전기기분야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조명분야는 조명기술연구소가 각각 업무를 수행한다.

중기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위해 수출하는데 필요한 각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2002년도 제3차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이며,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해서다.

지원 분야는 제품인증분야의 경우 CE, UL, FCC, FDA, VDE, CSA 등 62개 분야며, 시스템

인증분야는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 등 4개분야 (ISO9000은 제외)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수출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며,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특히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0일까지며 해당 기업의 공장이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